

북한 김정은 체제 여성의 세습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연구*

박영진** · 박동휘***

• 요 약 •

본 연구는 2020년대 이후 북한 정세에서 ‘여성의 대외적 활동’이 강해지는 현상을 세습 가능성과 연결하는 주장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김정은 체제 집권 이후 여성의 정치적 활동이 증가하는 현상은 ‘세습’을 위한 과정이 아닌 북한체제의 새로운 ‘정치적 특징’임을 알아보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제이슨 브라운리가 규정한 세습 이론과 북한의 후계자론을 바탕으로 북한체제에서 여성의 세습가능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브라운리의 이론을 북한체제에 적용했을 경우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과정에는 정확히 부합했다. 그러나 ‘여성’이라는 변수를 대입했을 경우 4대 세습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후계자론에 따르면 여성의 세습가능성은 부분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통계승론과 김일성화신론에 따르면 여성은 적절한 후계자로 나타나지만, 세대교체론과 혁명계승론, 준비단계론의 측면에서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정은에게 ‘아들’로 추정되는 인물이 존재하는 만큼 여성의 세습가능성은 이론에 부합하지 않으며 지속적인 관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최근 북한체제의 변화인 여성의 대외적 활동 강화와 세습가능성을 고찰하고, 김정은 체제의 새로운 특징인 ‘여성의 대외적 활동 강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여 논의거리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 북한, 김정은, 김여정, 세습, 브라운리

I. 서론

본 연구는 2020년대에 들어 북한 정세에서 여성의 대외적 활동이 강해지는 현상을 후

* 본 논문은 육군3사관학교 부설 충성대연구소 2023년도 논문게재비 지원을 받았음.

** 육군3사관학교 군사사학과 : 제1저자

*** 육군3사관학교 군사사학과장 : 교신저자

계자설 또는 4대 세습 가능성과 연결하는 주장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2011년 김정은 집권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여성의 대외적 활동 강화 현상이 ‘세습’을 위한 과정이 아니라 북한체제에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정치적 특징’이라는 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011년 김정은 집권 이후 정치적 특징 중 하나의 대표적 예는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의 대외적 활동 강화다. 김여정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당시 북측 대표단으로 참여하여 ‘평화의 사도’로서 얼굴을 알린 바 있다. 그러나 김여정은 2020년부터 남북관계가 악화되자 강도 높은 메시지를 연일 쏟아내며 북한의 대변인 역할을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다. 두 번째 사례는 김정은의 부인인 리설주이다. 그녀는 공식 석상에 몇 번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과격적 패션으로 북한에 일명 ‘리설주 스타일’ 열풍을 일으키기도 했다¹⁾. 세 번째 사례는 김정은의 차녀 김주애이다. 김주애는 2022년 11월 18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하는 자리에 김정은과 동행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됐다. 이어서 조선중앙TV는 2023년 1월 1일 노동당 중앙위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결과 보도 영상에서 김정은과 김주애가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을 시찰하는 모습을 강조했다. 즉, 이러한 현상은 김정은 집권 이전에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권력의 중심부에 여성의 존재가 드러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김정은 체제에서는 리설주, 김여정 등 여성 리더들의 등장으로 획일적 통제사회에서 소프트 파워 정치, 개인의 개성표현 인정 등 북한 사회가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 이 변화는 과거 김정일 체제에서 선군정치, 공포정치, 경제난 등 공포의 이미지를 풍기던 이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한편, 이 현상을 북한의 차기 후계자와 연결하는 주장이 등장했다. 美 CNN은 2020년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을 최초로 보도³⁾했고, 뒤이어 동년 4월 26일 韓 뉴데일리에서 김정은이 사망했다고 오보⁴⁾하며 후계자 문제가 점화되었다. 특히 2023년 새해에 들어서도 1월 5일 美 전략문제연구소(CSIS)가 개최한 북한의 리더십 관련 세미나에서 수미 테리 윌슨센터 아시아 국장은 “김정은에게 무슨 일어난다고 해도 혼란과 체제 붕괴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김여정으로 권력 이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⁵⁾고 발표했다. 즉 김정은 아

1) “김정은 부인 리설주 패션은 ‘남한스타일’”, 『연합뉴스』, 2012년 10월 2일.

2) 정유림·오철훈, “김정은 체제 이후 영화에서 나타나는 여성이미지 연구” 『한국휴먼이미지디자인』, 제1권 제2호, 한국휴먼이미지디자인학회, 2019, pp.1-9.

3) “US monitoring intelligence that North Korean leader is in grave danger after surgery”, 『CNN』, 2020년 4월 21일.

4) “北 김정은 사망...중국 외교부장 조카가 말했다”, 『뉴데일리』, 2020년 4월 26일.

5) “김여정, 北 2인자...김정은 갑자기 사망할 경우 후계자 가능성”, 『연합뉴스』, 2023년 1월 6일.

래 공식적 후계자가 아직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김정은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거나 북한 여성의 대외적 활동이 강화될수록 ‘후계자설’에 대한 주장은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행연구의 검토에 따르면 사회주의 체제의 권력승계⁶⁾, 소련의 권력승계⁷⁾, 독재국가의 권력세습⁸⁾, 북한체제의 세습⁹⁾, 김정일과 김정은의 세습전략¹⁰⁾ 등을 다룬 연구는 다수가 존재하지만, 북한 여성의 정치적 위상을 세습 가능성과 연결 짓는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가장 최근 연구로 김충렬¹¹⁾의 연구를 꼽을 수 있는데, 그는 “북한의 여성 정책은 이상적으로 존재하나 실제 모습은 전통 여성의 불이익과 불평등이 따로 존재하는 이중성이 존재한다”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북한의 김정은 유고 시 여성 혈통은 4대 세습을 이루어 낼 수 있는가?’이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제이슨 브라운리의 근대 독재국가에서의 세습¹²⁾에 대한 이론과 북한 후계자론을 통해 검증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이론에 근거한 논리적 추론과 문헌연구를 적용하고 있다.

II. 본론

1. 이론적 논의

가. 권력승계와 세습에 관한 정의

권력승계(Political Succession)는 권력의 변동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정치변동의 하위개념이다. 안드레인(Charles F. Andrain)은 “정치변동을 체제와 체제간의 변화”, “체제의 내적 변화”, “정책변화” 등으로 정의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제도화된 원칙과 절차에 따라 권력승계가 이루어지지만 사회주의 국가의 권력승계는 제도화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는 거의 드물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권력승계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지 않고 통치권자의 의지, 감정의 기복에 따라 지배를 받기 때문

6) Rush, M. *How communist states change their rulers*. (No Title). 1974.

7) Hodnett, G. *Succession contingencies in the Soviet Union*. Probs. Communism, 24, 1. 1975.

8) Gordon Tullock, *Autocracy*. Bost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87.

9) 유영파, “북한의 권력승계과정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0.

10) 오경섭, “김정일과 김정은의 권력승계 비교: 제도와 리더십의 동학을 중심으로”, 『세종정책연구』, 2012-4.

11) 김충렬, “김정은 체제에서의 북한 여성의 정치적 위상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67), 261-280. 2013.

12) Brownlee, J, *Hereditary succession in modern autocracies*. 『World Politics』, 59(4), pp.595-628.

에 정치권력의 변동은 항상 얼마간의 승계위기를 동반하고 있었다¹³⁾. 더욱이 사회주의 국가의 권력승계는 원칙과 절차가 부재한 상태에서의 비제도적 요인들에 의해서 권력승계가 이루어진 경우가 일반적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권력투쟁을 둘러싼 쿠데타나 대중봉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¹⁴⁾

북한의 경우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혈통승계를 두 번이나 성공적으로 이루어냈으므로, 북한의 특수한 사례는 ‘세습’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할 것이다. 브라운리는 권력세습을 “근대 독재정권에서 통치자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민주적 절차에 의존하지 않는 권력교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는 일부 학자들이 세습을 아랍 국가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혼한 현상이라고 정의하지만, 세습의 성공은 아랍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도 종종 발견되며 세습은 독재정치의 연장선으로 주변 사회가 아닌 정권 자체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¹⁵⁾. 그는 세습이 현대에서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세습이 단순히 지도자의 개인적 성향 때문이 아닌 기본적인 하나의 정치적 과정이라 주장했다. 독재국가에서 통치자는 권위를 가지게 되고, 자신을 지지하는 엘리트들을 핵심지위로 승진시키면서 권력의 안정을 공고화한다. 통치자와 엘리트들이 더 많은 권력을 행사할수록 반대파는 이를 견제하며 일종의 긴장감을 조성하게 되는데, 이때 ‘세습’은 정치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매력적 수단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세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당의 존재가 걸림돌이 된다. 당의 존재는 통치자에게 항상 우호적이지 않으며, 후계자 문제는 당과 통치자 간 좀처럼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잠재적 위협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세습은 ‘통치자가 당의 권위보다 앞설 때’ 또는 ‘통치자를 지지하는 파워엘리트들이 당을 장악하고 있을 때’는 세습을 성공할 수 있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브라운리는 그의 저서에서 통치자가 당의 권위보다 앞서는 사례로 도미니카공화국, 대만, 아제르바이잔, 싱가포르, 토고 등의 5개 사례를 꼽았다¹⁶⁾.

본 연구에서는 세습에 대한 정의는 브라운리의 개념을 따르지만 그가 주장한 이론에서 한 가지 재해석할 사항은 그는 북한 김일성의 사례를 공산당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세습에 성공한 유일한 이례적 사례로 분석하는데¹⁷⁾, 이와 같은 북한에 대한 구분은 초기 북한의 권력형성에 대한 맥락과 이해가 부족한 것이다¹⁸⁾.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13) 유영파, 위의 논문, pp.11-13.

14) 박광, “김정은 권력승계의 토대와 리더십 구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8.

15) Brownlee, op. cit., p.603.

16) Ibid., p.612.

17) Ibid., p.617.

사례가 브라운리가 제시한 이론에 정확히 부합한다는 김종원(2016)의 분류를 바탕으로 북한을 통치자의 권위가 당보다 앞서는 경우로 구분하고 본문을 통해 북한의 사례를 살펴 보며 이를 검토하고자 한다.

〈표 1〉 북한의 세습사례에 대한 분류

| 구 분 | 내 용 |
|------------|-----------------|
| 브라운리(2007) | 당의 권위 > 김일성의 권위 |
| 김종원(2016) | 김일성의 권위 > 당의 권위 |

* 출처: 저자작성

나. 브라운리의 세습에 대한 정의

브라운리는 그의 연구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주의 국가들의 세습에 대한 비교 분석을 연구하면서 세습에 대한 정교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세습은 단순히 최고 통치자에서 다음 인물로의 형식적 정권 이양이 아니라 사실상의 권력 이양을 수반하는 것을 뜻한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재국가에서 형제자매나 배우자가 통치자의 사망 이후 권력 이양을 이루어내지 못한 사례를 지적하며, 아버지-아들 간의 혈통적 세습이 형제 또는 자매간의 수평적 세습보다 더욱 매력적인 조건이라 제시했다. 또한 근대 독재국가에서의 세습은 통치자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민주적 절차인 공정한 선거에 의존하지 않는 ‘비민주적 정권’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정의했다. 그는 “세습이 엘리트들 사이의 권력분배를 지속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공한다”는 툴록(Tullock, 1987)의 정치이론을 한층 더 확장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3년 이상 통치했던 독재자 258명의 자료를 분석하고, “세습은 통치자의 권위가 당보다 우위에 있을 때, 그리고 세습에 대한 선례가 있을 때 엘리트들은 세습을 지지한다”고 주장했다¹⁹⁾.

또한 브라운리는 세습의 성공에 있어서 다른 중요한 점으로 지배 엘리트들(ruling elites)의 세습에 대한 지지여부를 꼽았다. 최고 통치자는 자신의 반대파로부터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에게 권력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지배 엘리트들은 통치자가 갑자기 사망하여 통제 범위 밖의 권력 투쟁이 일어나는 것보다 후계자를 지정하여 안정적으로 세습을 하는 것을 더욱 선호한다. 즉, 독재정권에서 세습은 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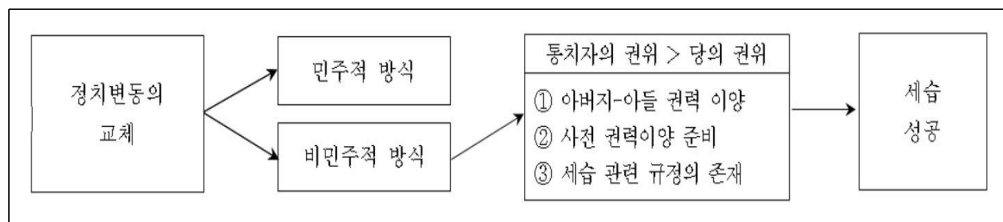
18) 김종원, “북한의 세습전략 연구: 제도적 선점과 견제력 약화”,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p.91.

19) Brownlee, op. cit., pp.597-601.

통치자와 이를 지지하는 지배 엘리트, 후계자(아들) 모두에게 최선의 수단인 것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로 후계자는 ‘아들’이어야만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브라운리는 그가 조사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집권한 독재자 258명 가운데 후계자의 횡적 계승(형제 또는 자매)은 다음 세대에 권력을 이양할 수 있는 아들을 갖지 못한 경우에만 일어났다고 밝혔다. 더불어, 통치자의 가족이나 형제자매들은 통치자와 같은 세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세대인 아들에 비해 매력적이지 않은 대상이라 밝혔다. 최고 통치자와 뒤를 이을 후계자가 세대가 달라야만 두 개의 세대를 거쳐 오랜 기간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지배 엘리트도 권력의 장기화를 노릴 수 있으므로, 후계자는 다음 세대, 그중에서도 아들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특히 통치자와 비슷한 나이의 친척이나 가족은 통치자의 죽음을 참을성 있게 기다리지 못하며 정권 유지를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독재국가에서 ‘아들’에 의한 세습은 권력 이양의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며, 엘리트들은 권력의 누수보다는 권력의 유지를 선호하기 때문에 세습을 더욱 지지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브라운리가 정의한 세습에 대한 이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독재국가에서 통치자의 권위가 당의 권위보다 우위에 있는 선결 조건을 달성할 경우 세습은 혈통을 중심으로 최고 통치자(아버지)로부터 자식(아들)에게 실질적 권력이 승계되는 현상이며 최고 통치자가 사망하기에 앞서 ‘권력을 이양하기 위한 준비와 시도’를 하고, ‘세습과 관련된 규정을 명문화 할 경우 세습은 성공할 수 있다’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 출처: 저자 작성

〈그림 1〉 독재국가에서 세습 성공의 조건

Ⅲ. 북한 세습 성공의 배경

1. 김일성의 제도적 선점: 북한 정권 초기 권력형성 과정

김일성의 제도적 선점 과정은 김일성이 조선로동당과 북한정권의 초기 성립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제도에 선행하며 당보다 우위에 서는 과정이라 요약할 수 있겠다. 김일성이 어떻게 당을 장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북한의 국가수립과정과 조선로동당의 창당과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서대숙의 『한국공산주의운동사연구』(서울: 이론과 실천, 1985)의 조선로동당에 대한 부분과 김일성의 리더십에 대한 도진 파트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서대숙의 연구에 따르면 북한은 위대한 지도자 김일성의 현명한 지도 아래 1945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이 수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해마다 그날을 기념하고 있다. 그 기념일은 조선로동당의 전신인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이 1945년 10월 10일 평양에서 개최한 ‘조선공산당 서북 5도 당책임자 및 열성자대회’를 기념해서 정한 것이다. 그러나 북로당과 남로당의 공식적인 합동은 제1차 전원합동회의가 개최된 1949년 6월 24일에야 완성되었다. 1945년 8월 광복 이후 분단구조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북한에는 국내파 공산주의자뿐 아니라 연안파, 구소련파, 빨치산파 등 각기 다른 세력들이 주도권을 갖기 위한 신경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1946년 8월 공산당과 신민당의 합당 결과 초대 북조선 로동당위원장에 연안파의 김두봉이 선출되고 김일성과 국내파의 주영하는 당의 부위원장에 선출되었다. 여기서 짐작가능한 사실은 북한이 처음부터 김일성 중심의 권력구조를 형성한 국가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김일성은 1948년 제2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실질적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김일성은 일부 당원들이 종파투쟁과 개인영웅주의에 빠져 당의 사업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²⁰⁾. 김일성은 첫 번째 목표로 토착 공산주의자들을 공격하기 위해 소련파와 연합했고, 북한에 뿌리가 없는 소련계 한인들은 김일성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오기섭을 비롯한 토착 공산주의자들은 남한에 있는 자신들의 지지세력 외 김일성과 소련파를 지지할 이유가 없었다. 따라서 이들은 김일성의 제거대상이 되었고 이러한 배경에는 김일성의 빨치산 동료들과 소련계 한인들이 연합했기에 가능했다. 중립을 지킨 연안파와 달리 소련계 한인들은 국내파 사람들을 격렬히 비난했고 김일성은 토착 공산주의자들을 몰아내기 위해 소련계 한인들을 철저히 이용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김일성은 1946년 2월

20) 서대숙(1985), 앞의 책, p.76.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수립하고 위원장에 취임함으로써 북한지역에서 실질적 권력을 장악하였다²¹⁾. 이제 김일성에게 남은 것은 공화국을 수립하고 당에 대한 지배권을 온전히 획득하는 것이었다. 그는 소련의 힘을 빌려 소비에트화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방 지도자들과 혁명가들을 이용했고, 소련의 지시를 따르는 한 그의 지위도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었다.

1947년 2월부터 공산주의 국가 수립을 선포한 1948년 9월까지 새로운 공화국의 수립 작업은 공식적 선언이 있기 훨씬 이전부터 단계적으로 준비되고 있었다. 1947년 11월 공화국 헌법을 기초하기 위한 위원회가 구성됐다. 1948년 2월 8일에는 조선인민군 창설이 결정됐다. 심지어 새로운 국가(國歌)가 작곡되어 1947년 6월에 발표되는 등 한반도 내 북한지역에 별개의 공산주의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토대는 이미 완성되었다. 김일성은 한국에 두 개의 정부가 수립되는 것에 반대했고, 자신의 공화국이 수립되었다는 선언을 남한 정부 수립 이후까지 미루었다. 여운형, 김구, 김규식 등과 같은 남한의 지도자들이 단독정부 수립을 막기를 희망하여 1948년 북한을 방문했지만 이미 북한은 4월 25일 시가지 행진에 스탈린의 초상화를 들고 스탈린 원수와 소련만세를 외칠 정도로 공산화되어 있었다²²⁾. 이후 1948년 9월 9일 북한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했다. 김일성은 자신을 수상에 임명했고, 김책과 최용건 등 빨치산 출신을 내각에 임명하여 권력을 장악했다.

정리하자면 김일성은 만주 유격대 출신으로 해방 이후 북한 내 정치적 기반이 부족했지만, 도리어 자신의 정치권력을 강화하는데 비상한 능력을 보임으로써 실질적 권력을 장악했다. 소련은 북한을 소비에트화하는 것이 한 명의 지도자를 키우는 것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김일성을 이용했고 김일성은 소련의 지위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지도자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었다²³⁾. 즉, 초기 북한 내 조선로동당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이 권력장악에 성공한 것은 소련과의 이해관계와 해방 이후 김일성에게 유리한 시대적 배경과 사건들이 맞물렸기에 가능했다.

2. 6·25전쟁과 김일성의 권력장악 과정

1950년 6·25전쟁과 1956년 8월 종파사건까지의 일련의 과정은 김일성이 그의 1인 지배체제를 강화시키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6·25전쟁은 김일성에게도 큰 모험이었다고

21) 유영파(2016), 앞의 논문, p.69.

22) 서대숙(1985), 위의 책, p.88.

23) 서대숙(1985), 앞의 책, p.93.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이유는 한반도 적화통일을 달성하지 못하면 권력유지에 위기를 맞게 될뿐더러, 패전의 책임을 지고 물러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전쟁에서 승리하면 김일성의 지배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권력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으며 공식적인 북한 내 1인자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그러나 결국 김일성은 전쟁에서 사실상 패배하며 원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했고, 구소련과 중국의 지원으로 전쟁을 종결하고 안정을 되찾게 되지만 패전의 요인과 책임을 파벌세력에게 전가하는 방안으로 위기를 탈출하게 된다²⁴⁾.

6·25전쟁의 발발 원인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은 박헌영(朴憲永, 1900~1955)으로 대표되는 국내파 공산주의자들과 김일성과의 관계다. 1949년 9월부터 1950년 3월까지 남한에서는 공산주의 게릴라 활동이 격화되었다. 남한의 두 공산주의 지도자인 김삼룡과 이주하는 남한 전복을 위한 3천여명의 요원을 바탕으로 게릴라전을 실시했으나 1950년 3월 27일 이들은 체포되고 말았다. 이로써 6·25전쟁이 발발하더라도 남한에서 게릴라에 의한 봉기를 일으킨다는 희망은 모두 사라져버렸다. 당시 박헌영은 남한에서 그의 리더십을 되찾기 위해 인민봉기를 선호했고 그의 주요 간부급 세력들이 체포당한 상황에서 6·25전쟁이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박헌영은 김일성에게 만약 조선인민군이 남한을 해방시키기 위해 군사행동을 시작하면 약 20만명에 달하는 남한 안의 추종자들이 봉기하여 남한정권을 전복시킬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²⁵⁾. 그러나 전쟁이 끝난 뒤 김일성은 박헌영이 말한 봉기는 일어나지 않았으며 박헌영을 “거짓말쟁이”로 매도했다.

1950년 12월 21일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은 전쟁을 잘못 수행한 그의 빨치산 동료들을 비롯해 거의 모든 사람들을 비판했고, 박헌영의 측근인 김일, 최광, 임춘추, 김열 등을 직위 해제하여 당에서 축출했다. 연안파의 김한중, 무정, 국내파의 허성택, 박광희 등도 공격받았다. 이후 중공군의 대공세로 잃어버린 땅의 대부분을 수복했을 때 이들도 복귀되었지만 연안파의 무정(武亭, 1904~1951)만은 영원히 축출되었다. 이유는 표면적으로 평양 방어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지만 무정이 김일성이 잠재적 경쟁자이며 유명한 군사지도자였기 때문이다. 이후 1951년 중공군이 전선을 교착상태로 이끌게 되자 김일성은 당면한 문제를 놓고 또 다른 이와 대립을 벌이게 되는데 그 인물은 바로 소련파의 최고실력자인 허가이(許哥而, 1904~1953)였다. 김일성은 제3차 전원회의에서 충성스럽지 못한 당원들을 엄단할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하며 무차별적인 숙청은 자제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린 1951년까지 약 1년 동안 허가이는 60

24) 유영파(2010), 앞의 논문, pp.74-75.

25) 서대숙(1985), 위의 책, p.107.

만 당원 가운데 45만을 추방하고 처벌했다²⁶). 이와 별개로 김일성과 허가이는 공산당을 꾸리는 데 있어 소련 스타일의 ‘엘리트 중심’의 공산당을 만드느냐 아니면 ‘대중적인 당’을 만드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대립했다. 허가이는 전자를 지지했고, 김일성은 후자를 지지했다. 김일성은 허가이가 잘 맞지도 않는 외국방식을 조선에 기계적으로 강요한다며 비판했다. 1952년 12월 15일 제5차 전원회의가 열렸을 때 허가이가 지시한 당원 추방 명령은 철회되었고 허가이는 결국 책임을 지고 당에서 축출되었다. 1953년 8월 4일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허가이가 자살했다는 발표가 있었고 그의 비겁한 행위는 비난받았다. 김일성은 허가이를 개인영웅주의에 빠지는 죄를 저질렀다며 매도했다.

허가이가 축출된 이후 김일성은 그가 맡았던 자리에 다른 소련계 한인들을 임명하며 대체했다. 김일성과 허가이의 충돌은 빨치산세력과 소련과의 조직적인 대립은 아니었으며 강력한 공산당을 수립하기 위한 의견이 차이 즉 개인적 대립에 가까웠다. 그러나 1950년부터 이루어진 김일성에 대한 국내파의 도전은 이와 달랐다. 그것은 김일성을 타도하고 자기들의 지도자인 박헌영으로 대체하려는 조직적인 노력이었다. 김일성과 견주어볼 때 박헌영은 한국 공산주의 혁명의 주류를 대표했고 해방 이후 남북한 공산주의자들 모두의 지지를 받았다²⁷).

김일성에 대한 직접적 도전은 박헌영의 최측근이자 제1차 내각의 법무상이었던 이승엽(李承燁, 1906~1954)에 의해서였다. 1950년 6월~9월 경 북한이 남한을 점령했을 때 남쪽으로 돌아온 남로당 계열은 박헌영의 지지세력들을 구축했다. 그들은 토지개혁법을 시행하여 남한에 있는 토지를 몰수하고 재분배하고 징집법을 공포하여 남한의 시민들을 인민군으로 징집하기도 했으나 유엔군이 북으로 진격함에 따라 이러한 조치들은 실패했다. 이승엽은 김일성을 실각시키기 위해 1951년 9월부터 군사쿠테타를 준비하고 쿠테타는 1953년 초에 시도되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²⁸). 이승엽을 비롯한 남로당 계열의 핵심세력 12명은 “북한정권 전복음모와 반국가적 간첩테러, 선전·선동행위”에 대한 명목으로 기소되었고 이들은 김일성을 자기들의 지도자인 박헌영으로 대체하기를 원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이들 중 10명은 사형당했고 박헌영 또한 1953년 같은 명목으로 체포당하고 ‘미제의 간첩’으로 몰리며 1956년 처형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26) 서대숙(1985), 앞의 책, p.109.

27) 서대숙(1985), 위의 책, p.112.

28) 서대숙(1985), 앞의 책, p.115.

3. ‘당’의 다원성 상실: 8월 종파사건

북한 내 김일성이 단행한 첫 번째 숙청이 국내파로 칭하는 남로당 계열에 대한 숙청이었다면, 두 번째는 소련파에 대한 대대적 숙청이었다. 1953년 남로당 계열에 대한 숙청 이후 김일성의 정치적 생명에 큰 위협을 주는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스탈린 격하운동’이다. 1953년 3월 스탈린이 사망한 이후, 흐루시초프가 등장하게 되면서 스탈린의 죄상을 날날이 고발하며 발단이 된다. 1956년 제20차 전당대회에서 흐루시초프는 스탈린의 잔인성과 비인도성을 공격하며 ‘숭배’와 ‘신격화’는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부합될 수 없으며 무관계한 것이라고 단죄하고, 국민 생활 전반에 1인 체제에서 다시 집단 지도체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²⁹⁾. 스탈린 격하운동은 북한에서 자신의 권의주의적 권력을 수립하기 위해 스탈린을 모방하려던 김일성의 노력을 직접적으로 위협했다. 1955년 12월 28일 김일성이 소련에 대한 대응으로 ‘주체’사상에 대해 처음으로 연설한 것은 이러한 연유에 근거하며, 주요 내용은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성을 확립하자”는 취지였다³⁰⁾.

남로당 계열에 대한 대대적 숙청 이후 조선로동당의 파벌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첫째는 허가이 숙청 이후 박창옥으로 대표되는 소련파다. 둘째는 김두봉, 최창익으로 대표되는 연안파다. 셋째는 김일성과 동북항일연군에서 활동했던 빨치산파로 군부를 장악하고 있었다. 스탈린 격하운동의 움직임 하에 소련파의 박창옥은 연안파의 최창익과 연합하여 소련을 따라 북한을 집단지도체제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러한 주장은 김일성의 리더십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그러나 군부를 장악한 김일성과 빨치산파는 소련파와 연안파를 대대적으로 공격하면서 무자비하게 공격했고 결국 소련파의 박창옥과 연안파 최창익의 김일성에 대한 정면도전은 실패로 끝나 연안파 세력들은 중국으로, 소련파들은 소련으로 흩어지고 말았다³¹⁾.

1958년 2월 8일 조선인민군 창설 10주년 기념연설에서 김일성은 “인민군이 만주에서 전개했던 그의 빨치산 항일무장투쟁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라며, 자기의 빨치산을 제외한 다른 공산주의자들의 무장투쟁은 모두 실패했다고 말했다. 김일성은 이제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었고 누구도 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없었다. 비록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주요 기점이었던 6·25전쟁은 실패로 끝났고 소련과 중국의 영향력 변화에 따른 리더십 도전도 있었지만 김일성은 그러한 위기들을 유연하게 대처하며 권력장악에 성공

29) 안드레이란코프, 『(소련의 자료로 본) 북한현대정치사』, (서울: 오름, 1995).

30) 강석승, “김일성 가(家)의 피의 숙청사”, 사회과학연구, 4, pp.131-156.

31) 강석승(2013), 위의 논문, p.139.

했다. 국내파가 그에게 도전했을 때 연안파는 중립을 지켰고, 소련파는 김일성을 도와 국내파를 탄압했다. 소련파는 북한에 정치적 기반이 없었고, 연안파와 소련파가 김일성에게 도전했을 때 국내파는 대부분 숙청당한 이후였고 빨치산파가 득세할 수 있었다. 이로써 김일성의 리더십에 대한 북한 내 모든 형태의 조직적 도전은 사실상 종결되었다³²⁾.

이러한 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서문에 언급한 브라운리(2007)가 북한이 당의 권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세습에 성공한 특이한 사례로 분석한 것은 오류라고 볼 수 있으며, 오히려 북한의 세습 사례는 브라운리의 이론에 정확히 부합하는 모범적 사례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김일성의 권력장악 과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김일성의 권력장악 과정

| 구 분 | 주요 숙청세력 | 주요 사건 | 주요 인물 |
|-----------|----------|-----------|-----------------|
| 1948~1953 | 국내파 | 북한정권 수립 | 박헌영, 이승엽 등 |
| 1951~1953 | 연안파 | 6·25전쟁 | 무정, 허가이 등 |
| 1953~1956 | 소련파, 연안파 | 스탈린 격하 운동 | 박창옥, 최창익, 김두봉 등 |

* 출처: 서대숙, 『한국공산주의운동사연구』(서울: 이론과 실천, 198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IV. 세습의 준비(사상·정치적 기반 마련 과정)

1. 수령론

북한 체제가 부자간 3대 세습으로 악명 높은 정권으로 유명하지만, 나름대로 그들의 세습논리를 정당화하는 이론은 존재한다. 세습의 이론을 형성하는 데는 1960년대 북한 대내외적 영향에 근거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내적으로는 1963년 이후 북한 경제가 계속해서 침체되면서 당 정책에 대한 내부적 동요와 불만이 나타났고, 이러한 경제 침체는 1960년대 김일성과 갑산파의 대결을 낳았으며, 1967년 갑산파에 대한 숙청 이후 수령체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고 있다³³⁾. 대외적으로는 국제 환경 변화를 들 수 있는데, 특히 1962년 쿠바 미사일 사태는 북한으로 하여금 주체 담론을 강화시키는 결정적 계기였다. 쿠바사태가 벌어진 1962년에 경제-국방 병진 노선과 국방에서의 자위, 그리고 4대

32) 서대숙(1985), 앞의 책, p.137.

33) 류길재, “1960년대 북한의 숙청과 술탄니즘(Sultanism)의 등장”, 국제관계연구, p.93.

군사노선 등이 제기된 것이다³⁴). 즉, 1960년대를 둘러싼 북한의 대내외적 환경 변화로 인해 북한은 ‘자주적 사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주체사상이 수령론과 결합하며 ‘유일지배체계’를 형성하기에 이른다. 갑산과 숙청은 김정일이 깊이 관여했고, ‘유일사상체계’ 확립과 주체사상의 ‘수령론’은 김정은을 위한 논리다.

오늘날까지 북한의 공식 간행물에는 김일성에게는 ‘위대한 수령’이라는 칭호를, 김정일에게는 ‘장군님’ 또는 ‘령도자’를, 김정은에게는 ‘대장’, ‘원수’, ‘총비서’로 칭하다가 김정은 정권 10년차를 맞는 2021년 말부터 ‘수령’이라 지칭하고 있다³⁵). 언론을 비롯한 여러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일마저 사후에 쓸 수 있었던 수령이라는 호칭이 김정은의 권력 강화를 위해 지칭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맑시즘에 있어서 수령이라는 용어는 엥겔스가 처음 사용했으나 이론적으로 정립하지는 않았고 레닌은 수령을 한 개인이 아니라 복수의 최고지도자들로 구성되는 하나의 집단으로 규정하였다. 북한 역시 1966까지 제한적으로 이러한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해왔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은 1967년 이후였다³⁶). 1969년 4월 김일성의 57회 생일에 즈음하여 ‘혁명적 수령관’에 대한 이론적 작업이 진행됐다.

혁명적 수령관은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휘와 역할’에 대해 북한이 제시하고 있는 견해와 관점을 일컫는 말이며, 골자는 레닌이 주장한 당-대중의 견해와 달리, 김일성 중심의 수령-당-대중으로 재정립하는 북한 고유의 이론이라 볼 수 있다. 혁명적 수령관에서 수령의 지위는 혁명의 ‘뇌수’로서 개인과 엄격히 구별된다. 노동계급의 수령을 혁명의 뇌수라 칭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수령이 혁명투쟁의 최고 영도자라는 뜻이며 인민대중과 당을 통일단결 시키는 최고의 지도자란 뜻이다. 혁명적 수령관은 1972년 들어 ‘사회정치적 생명체론’과 결합하여 수령론을 정립하는데, 골자는 초월적 지도자 수령과 이에 충성을 다하는 인민대중간의 봉건적 공동체가 사회주의적 틀 속에서 하나의 생명체로 변형된 것을 의미한다³⁷). 즉, 사회주의 공산혁명을 달성하려면 하나의 영도자, 수령이 있어야 하는데 인민대중들의 의욕이나 전략만으로는 혁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고 사상과 전략전술을 부여할 ‘뇌수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수령이다. 수령이 있고서야 로동당과 계급이 존재할 수 있고, 노동계급의 영도가 있고서야 인민대중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³⁸).

34) 류길재(2004), 앞의 논문, p.100.

35) “통일부 김정은 수령 호칭 늘어...당대회 결정관철·충성 차원”, 『연합뉴스』, 2021년 11월 12일.

36) 이경식, 『수령의 나라』, 서울: 한국학술정보, 2021, pp.147-149.

37) 이경식(2021), 위의 책, p.163.

38) 황장엽, 『황장엽 회고록: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서울: 한울, 1995, p.146.

이러한 수령론의 이론적 정립은 김일성의 절대적 권력 강화를 의미하며 ‘집단지도체제’에서 ‘유일지배체제’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김일성이 수령체제라는 권력구조를 만들어내고 1974년 2월 아들 김정일을 후계자로 확정하면서 북한은 전통적 사회주의 체제라기 보다는 ‘술타니즘’에 가까운 독특한 북한만의 체제로 변하기 시작했다. 1974년 4월 14일 김정일이 “전당과 온사회에 유일사상체제를 더욱 튼튼히 세우자”라는 제목으로 제시한 “당의 유일사상체제확립의 10대원칙”에 대해 살펴보면 북한에서 수령이 가지는 절대적 위치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하며 완성하여야 한다³⁹⁾.

전체적인 주요 내용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게 충성하고 우러러 잘 받들며, 그의 지시를 무조건 이행해야 한다는 술타니즘적 종교적 색채가 보인다. 본 연구에서 주목할 부분은 위 ‘10항’으로, 수령이 김일성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혁명위업”의 달성을 위해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해야 한다고 명문화한 부분이다. 여기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후계자의 경우 김일성과 같은 세대가 아닌 아랫세대, 즉 ‘김정일’이 이어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1974년 2월 김정일에 의해 위와 같이 수령론이 정립된 것은 곧 김정일의 위상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⁴⁰⁾. 1970년대는 혁명 1세대의 혁명과업을 혁명 2세대에게 이양하는 시기였으므로 권력의 수반을 통째로 이양하는 후계체제가 조심스럽게 제기되었다. 김정일은 이러한 논지를 바탕으로 수령의 후계자로 등장할 수 있었다. 수령론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북한 사회 전 분야가 수령을 정점으로 재편되었다. 북한은 이제 수령 없이는 정치체제가 설명이 어려운 술타니즘 국가가 되었다. 이후, 위와 같은 논리는 김정은 시대에 이르러 혁명 2세대-3세대의 계승 간 다시 등장하게 된다. “당의 유일사상체제확립의 10대원칙”은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후인 2013년 6월 “당의 유일적령도체제확립의 10대원칙”으로 바뀌었다⁴¹⁾. 개정된 내용의 골자는 김일성을 “수령님”, 김정일을 “장군님”으로 호칭해 김일성의 격을 다소 높였고, 김정일이 김일성과 거의 동등한 지위의 반열에 올라섰다는 점이다.

39) 편집부(1974), [자료] 당의 유일사상체제확립의 10대 원칙, 북한, pp.207-218.

40) 이경식(2021), 앞의 책, p.152.

41) 안희창, 『북한의 통치체제: 지배구조와 사회통제』(서울: 명인문화사, 2016), p.70.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이끌어오신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하여야 한다.42)”

세습과 관련해 주목할 부분은 이전과 동일하게 위 10항이다. 이 같은 북한의 조치는 세습을 정당화하기 위해 정통성이 부족한 김정은의 정권안정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⁴³⁾. 김정은의 정통성 확보를 위해 김일성-김정일을 신격화한 후 김정은이 이들의 아들이라는 점을 부각함으로써 3대 세습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10항의 혁명위업 계승은 ‘주체’와 ‘선군’ 두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정치적 특징인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차기 수령은 이를 철저히 계승해야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혁명위업은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 완성해야 하는데 김정은 세대에서 혁명위업을 세대 간 이어서 계승해야 하고 만일 이것이 미비할 시 다음 세대에서 이를 이어받아 계승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둔 규정이라 볼 수 있다.

수령의 권위와 세습을 정당화했던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10대원칙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김정은 시대에도 이와 같은 원칙이 김정은 중심으로 수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자가 김일성 중심, 후자가 김일성과 김정일 중심이었듯, 김정은이 자신의 대에서 이를 다시 개정한다면 자신의 업적을 포함하여 스스로를 신격화시키고 혁명위업의 계승을 선포할 가능성이 다분히 높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23년 1월 2일 노동신문 1면에 “김정은 총비서의 혁명사상”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를 “우리 조국과 인민을 가장 과학적이며 정당한 진리의 길, 무궁한 존엄과 영예 떨치는 자존과 번영의 길로 향하는 백승의 기치”, “김정은 혁명사상은 백년대계의 이정표”라고 언론에 보도⁴⁴⁾된 바에서 알 수 있듯, 김정은 대에 이르러 김정은 혁명사상의 신념화와 체질화는 지속하여 강조하고 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그랬듯, 10항 세습관련 규정에 “대를 이어”라는 부분을 명시한다면 이를 통해 김정은의 후계자가 어느 세대에서 나올지 추론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즉, 훗날 이루어질 김정은의 10대원칙 개정은 김정은의 후계자의 세습논리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김정은의 후계자가 누구인지 윤곽을 좁힐 수 있는 하나의 분석틀로써 활용될 수 있다.

42) 강동완 & 김현정(2015), 북한의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제정 의미와 북한 주민들의 인식: 북한내부 문건 분석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19(1), pp.339-365.

43) 안희창(2016), 앞의 책, p.72.

44) “북한 김정은 혁명사상이 과학이자 진리...‘김정은주의’ 재부각”, 『뉴스1』, 2023년 2월 2일.

2. 후계자론

북한의 후계자론은 수령론의 연장선상에 있다. 후계자론은 김일성-김정일로 이어지는 부자 간 세습체제를 구축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내세운 논리이다. 대표 문헌으로는 김재천, 『후계자문제의 이론과 실천』(출판지·출판사 불명, 1989), 김유민, 『후계자론』(출판지 불명: 신문화사, 1984)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 두가지 문헌을 바탕으로 후계자론을 정리한 통일연구원 이교덕의 “북한의 후계자론(2003)”과 정영철의 “북한의 후계자론과 현실: 이론의 형해화와 현실의 계승(2009)”, 곽승지의 “북한의 후계자론과 권력승계 과정(1993)” 등 세 가지의 논문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북한은 권력세습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로서 후계자론을 내세웠으며 이에 기반하여 김정일을 김일성의 후계자로 공고화하는 데 성공했다. 후계자론은 동기면에서 수령의 유일지배체제를 확립하기 위함은 물론, 김일성 사후 권력의 향방을 규정하기 위한 논리다. 내용 면에 있어서도 권력의 핵심 직위를 승계하는 것을 초월하여 북한의 유일한 통치자 ‘수령’을 승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북한에서 후계자론은 독자적 이론체계라기 보다는 ‘수령론-후계자론’으로 이어지는 집합적 이론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⁴⁵⁾. 수령론은 1967년 이후, 수령에 대한 개념의 이론적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으로 초기 구성되기 시작했고 1970년대 김정일에 의해 본격적으로 이론화 과정을 거쳐 1986년 경 ‘사회정치적 생명체론’과 결합하여 완성된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즉, 수령론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곧 후계자론의 정립 과정이기도 하다. 북한에서 후계자는 본질적으로 권력의 승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수령의 영도적 지위와 역할을 계승하여 혁명위업 달성의 사명을 지닌 미래의 수령을 뜻하기 때문이다. 선행연구 검토에 따르면 학자들은 후계자론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표 3〉 북한 후계자론의 구성

| 구분 | 내 용 | | | | |
|---------------|---------------|-----------|---------|---------|----------|
| 곽승지 (1993) | ① 혁명계승론 | ② 혈통계승론 | ③ 세대교체론 | ④ 준비단계론 | ⑤ 김일성화신론 |
| 이교덕 (2003) | ① 후계자의 지위와 역할 | ② 후계자의 요건 | ③ 세대교체론 | ④ 준비론 | ⑤ 김일성체현론 |
| 정영철 (2009) | ① 계승론 | ② 인물론 | ③ 지도론 | ③ 항에 포함 | ② 항에 포함 |

*출처: 위 연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45) 정영철(2009), 앞의 논문, p.282.

북한이 주장하는 ‘혁명계승론’에 따르면 후계자는 수령의 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여야 한다. 이는 김일성이 1975년 3월의 연설에서 “노동계급은 착취적인 제국주의와 자본주의를 전복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한 후에도 ‘혁명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한 데서 근거한다⁴⁶⁾. 즉 사회주의 체제에서 혁명위업은 혁명완수의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투쟁해야 하는 사업이므로 수령의 후계자는 전대 수령의 혁명위업을 이어 받아 계속하여 수행해야 한다는 논리다. 즉, 혁명이 장기화되고 복잡하게 진행됨에 따라 인민대중들이 혁명에 대한 권태감으로 방향성을 상실하는 상황이 올 때 수령이 이미 개척한 혁명위업을 고수하고 계승할 수 있는 지도자인 ‘후계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⁴⁷⁾. 이러한 논리는 중국의 문화혁명 기간 동안 제기되었던 “계속혁명론”에 근거하는데 이는 후계자론의 뿌리가 되며 북한이 후계문제를 수령의 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⁴⁸⁾.

그렇다면 이러한 지위와 역할이 부여된 ‘혁명위업’을 계승할 수령의 후계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러한 논리를 관통하는 이론이 바로 ‘혈통계승론’이다. 혈통계승론은 오늘날 북한 정치체제의 성격을 사회주의 체제인지 스탈타니즘 국가인지 모호하게 만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혈통계승론에서 ‘혈통’이라는 용어를 통해 수령의 후계자는 수령의 핏줄을 이어받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움으로써 혈통세습을 정당화하고 있다. 북한은 혈통의 의미를 ‘당의 혈통’, ‘주체의 혈통’ 등의 이중적 의미로 포장하고 있는데, 결국 “사람의 유기체에 한 가지 피만이 흘러야 생명이 유지되듯이 노동계급의 당도 자기의 혈통을 순결하게 계승해 나가야 변질되지 않고 자기혁명의 성격을 고수할 수 있으며 하나의 핏줄기로 당과 혁명의 명맥을 이어나가야 혁명위업의 중국적 승리를 이룩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혈통계승의 필연성을 강조하고 있다⁴⁹⁾. 따라서 후계자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바탕으로 수령의 사상과 혁명위업을 계승발전시키며⁵⁰⁾, 수령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상, 이론, 방법의 전 영역에서 수령의 위업을 보좌, 계승할 ‘충실성’이 보장된 인물이 필요한데, 혁명의 ‘계승’을 이끌어 나갈 적격자는 ‘혈통’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북한에게 계승은 수령의 대를 이은 충성을 구조적으로 계승하는 것보다도 어떤 ‘인물’에 의해 계승되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다⁵¹⁾.

46) 광승지(1993), 앞의 논문, p.49.

47) 이교덕(2003), 앞의 논문, p.25.

48) 이교덕(2003), 앞의 논문, p.18.

49) 광승지(1993), 앞의 논문, p.50.

50) 김재천(1989), 앞의 책, p.31.

수령의 자질에 대한 요구는 이른바 ‘김일성체현(화신)론’으로 뒷받침된다. 수령의 후계자는 수령의 모든 것을 체현하고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수령의 후계자는 무엇보다도 수령에 충직한 사람이어야 하며, 수령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간직하고 수령의 원대한 구상을 성취하는 것을 필생의 위업으로 삼고 수령의 사상과 의도를 한 치의 그림도 없이 구현해나가려는 신념과 의지를 가진 사람만이 수령의 위업을 빛나게 계승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⁵²⁾. 그리고 이어 북한은 “이러한 계승자의 상을 김정일 지도자 선생님에게서 찾게 되었다”며 김정일이 지닌 모든 것이 김일성 주석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주장하여 김정일을 수령의 후계자가 지녀야 할 자질을 완벽하게 갖춘 유일한 사람으로 내세웠다.

북한의 후계자론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부분은 바로 ‘세대교체론’이다. 세대교체론은 수령과 후계자의 세대적 관계가 동일 세대가 아닌, 서로 다른 세대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첫 번째 요건인 “혁명계승론”과도 연결된다. 후계자는 수령의 혁명위업을 계승하여 완성시켜야 하는 영도자이므로 수령과 함께 혁명활동을 해온 세대가 아니라 수령의 다음 세대에 속하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후계자의 연령적 조건에 관한 것이다⁵³⁾. 이러한 논리는 혁명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므로 장기간 수행해야 하는 투쟁의 성격인데, 수령이 자주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제에 근거한다. 수령과 같은 세대에 속하는 인물을 후계자로 내세우게 되면 그의 영도기간이 짧을 수 밖에 없어 다시 후계자를 선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혁명위업을 완성하는데 커다란 장애를 초래하게 된다고 한다⁵⁴⁾.

끝으로 세대교체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준비단계론’이다. 이는 후계자 선출의 시기에 대해 규정해 놓은 것이다. 후계자는 수령의 혁명위업을 계승하여 이를 완성시켜야 하기 때문에 수령 생존 시에 결정되어 일정기간 수령에 의해 지도받고 준비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북한은 후계자를 키우는 것이 “수령이 자기 당대에 수행해야 할 가장 중대한 위업 중 하나”라고 한다. 이러한 준비과정은 후계자가 “수령의 직접적 영도 하에 그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그를 따라 배우며 그의 영도를 직접 보좌하는 실천활동”을 통해 “후계를 준비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관행”이다⁵⁵⁾. 북한이 주장한 후계자론에 가장 근접한 인물은 김정일이며 그는 후계자로 옹립된 1970년대부터 오랜 준비

51) 정영철(2009), 앞의 논문, p.284.

52) 광승지(1993), 위의 논문, p.54.

53) 이교덕(2003), 앞의 논문, p.42.

54) 김재천(1989), 앞의 책, p.43.

55) 광승지(1993), 앞의 논문, p.53.

기간을 거쳐 김일성 사후 권력을 안정적으로 계승했다.

반면 2010년 제3차 당대표자회의에서 김정은은 후계자로 옹립된 후 육성된 시기가 무척 짧았고, 따라서 잔혹한 숙청을 통해 권력을 공고히 했다. 이후 김정은은 수령으로 갖춰야 할 품격과 자질을 증명하기 위해 초대 수령 김일성의 체중 뿐 아니라 헤어스타일, 인민복 착용, 손동작 등 모든 분야에서 과도하게 모방하며 인민에게 김일성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정통성 강화에 노력했다. 후계자론의 핵심은 후계자의 자질과 관련된 ‘인물론’이며 이로 인해 각종 선전과 포장을 통한 후계자의 이미지 만들기 과정을 통해 후계자가 다음 세대의 수령으로서 적합한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된다⁵⁶⁾.

3. 여성의 세습가능성에 대한 논의

가. 브라운리의 이론을 통해 본 세습가능성

브라운리의 이론을 다시 정리하자면, 통치자가 제도에 선행한 경우(통치자의 권위 > 당의 권위) 세습이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다는 것이다. 즉 북한의 경우 수령은 당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당보다 제도적 우위에 있고 세습 관련 규정이 존재하므로 북한 체제는 세습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정치적 지형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브라운리의 이론을 북한의 사례에 적용하여 김정은 이후 후계자를 추론할 경우 첫 번째 조건인 아버지-아들에게로 권력이양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을 통해 검증할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은 이후 후계자로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는 김여정을 비롯한 여성 후계자에 적용할 경우 이론은 부합하지 않는다. 브라운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258명의 독재자를 분석하며, 이른바 “횡적계승(lateral succession)”은 다음 세대에 수직으로 권력을 이양할 ‘아들’을 갖지 못한 소모자 정권(Somoza Regime)에서만 일어났고⁵⁷⁾ 이외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재국가에서는 자매와 배우자는 형제와 남편의 뒤를 잇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록 영향력 있는 지위를 차지하긴 하지만 통치자의 사망 최고의 자리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의 역할은 백두혈통에서도 그 한계를 드러냈는데, 과거 김일성의 배우자인 김성애는 조선민주주의여성동맹 위원장에 그쳤으며, 김정일은 여동생 김경희보다는 배우자 장성택에게 더 큰 역할을 맡겼었다. 김정은 정권의 김여정은 다소 이례적이라 볼 수 있다. 김여정은 2020년까지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겸 정치국 후보위원이었다가 2021년 1월 선전선동부 부부장 및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강등된 이래

56) 정영철, “북한의 후계자론과 현실: 이론의 형해화와 현실의 계승”, 북한연구학회보, 13(1), p.290.

57) Brownlee, op. cit., p.605.

2021년 6월부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명의로 연이은 대남·대미메시지를 발표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재 김정은에게 2010년생으로 추정되는 아들이 존재한다⁵⁸⁾는 측면에서, 여동생 김여정을 비롯하여 2023년 대외 활동 동행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둘째 딸 김주애는 브라운리의 이론에 근거했을 때 모두 후계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추론할 수 있겠다.

나. 후계자론을 통해 본 세습가능성

첫째로 후계자의 ‘자질’에 관한 이론을 적용하여 후계자의 범위를 한정하자면, 김여정과 김주애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갖춘 아주 적극적인 후보라 볼 수 있다. ‘혈통계승론’에 따르면 수령의 혈통을 계승한 후계자만이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따라 혈통의 순결성을 유지하여 혁명의 성격이 변질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자격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인물이라면 김일성과 같은 피를 계승하는 백두혈통이 대상일 수밖에 없다. 이를 뒷받침하는 ‘김일성화신론’에 따르면 수령의 후계자는 김일성의 모든 것을 체현하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김일성에게 충실한 자여야만 한다는 논리인데, 북한은 이에 가장 적극적인 인물로 북한은 김정일을 내세운 전력이 있고, 이 논리는 김정은까지 이어져 3대 세습을 가능하게 했다. 즉, 혈통계승론과 김일성화신론은 결국 혈통 세습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근거했을 때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과 둘째 딸 김주애는 후계자의 자질을 충족하는 인물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둘째로 ‘혁명계승론’과 ‘세대교체론’에 따르면 김여정 후계자론에 부합한 인물이 아니다. 세대교체론에 따르면 후계자는 수령의 다음 세대에서 나와야 한다. 이는 ‘혁명계승론’과 연결되어 후계자는 수령의 ‘대를 이어’야 한다. 즉 이 논리에 따르면 現 김정은 시대 여동생 김여정이 김정은의 후계자라는 주장이 간헐적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원칙적으로 수령의 후계자는 수령의 다음 세대에서 선출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혈통 부자승계의 원칙을 고려한다면, 김정은의 후계자는 같은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즉, 원칙적으로 김정은과 ‘같은’ 세대인 김여정은 적절하지 않으며 ‘다른’ 세대인 김주애는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준비단계론은 후계자는 수령의 혁명 위업을 계승·완성해야 하므로 수령의 생존 시 후계자는 수령의 영도를 받아 일정기간 육성되고 준비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김정일은 1964년부터 당 사업을 시작했고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쳤으며 특히 김일성의 유일지배

58) “국정원, 김정은 첫째는 아들...셋째는 아직 성별 확인 안돼”, 『조선일보』, 2023년 3월 7일.

체제를 확립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에 비해 김정은은 김정일이 사망하기 전 약 1년에 걸쳐 준비를 했고 후계자 육성시기가 짧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초래했다. 특히 김정은은 집권 이후 김정일 시대 권력의 핵심이었던 장성택을 “동상이몽, 양봉음위”하는 종파적 행위를 일삼았다며 숙청하고 이를 통해 세습 이후 권력을 더욱 공고히 했다. 이러한 뼈아픈 경험적 요인에 따라 김정은 이후 후계자는 최대한 빨리 결정하고 권력을 승계할 때 까지 오랜 기간 체계적으로 준비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김여정이 대남대미 담당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어 세간에서는 김여정이 마치 김정은의 후계자인 것처럼 주목하지만 그것은 후계자 수업이 아닌 수령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부여받은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향후 김정일과 김정은이 그러했듯, 김여정이 사상과 정치적 기반의 마련, 실질적 권력의 핵심지위를 승계하여 공식적 2인자로 등극한다면, ‘준비단계론’에서 말하는 “수령의 직접적 영도 하에 보좌하는 실천활동”이라 규정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어디까지 김정은이 부여한 권한 내에서 수령을 보좌하는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2023년 들어 미사일 발사 현장을 비롯한 북한의 공식석상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김정은의 딸 김주애 역시 후계자론의 요건 중 ‘혈통계승론’, ‘김일성화신론’과 더불어 ‘세대교체론’, ‘혁명계승론’의 요건에 모두 부합한 후보지만 ‘준비단계론’의 입장에서 지속적 관심이 필요한 인물이라 볼 수 있겠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최근 북한 정세에서 여성의 대외적 활동이 강해지는 현상을 4대 세습의 후계자와 연결하는 주장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 하나의 탐색적 연구다. 이를 위해 제이슨 브라운리가 규정한 세습에 관한 이론과 북한의 후계자론을 통해 북한에서 여성의 세습가능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2022년 12월 발생한 북한의 무인기 도발 이후 엄중한 안보 분위기가 지속되며, 김정은의 후계자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는 2023년 현 시점에서 북한 체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 판단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먼저 브라운리의 이론을 통해 고찰한 결과 북한의 3대 세습 사례는 통치자의 권위당당의 권위보다 높은 경우로 세습이 형성될 수 있는 선행조건을 갖춘 것이라 볼 수 있었다. 또한, 그가 제시한 세 가지 조건인 아버지-아들에게로 권력 이양, 통치자가 생전에

권력 이전의 준비와 시도, 세습 관련 법적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북한을 적용하면 3대 세습까지는 정확히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부자 간 3대 세습을 이루어낸 국가이고, 모두 죽기 전 후계자에게 권력을 이양할 준비를 했다. 더불어 수령론-후계자론 그리고 당의 유일적령도체계 확립 10대 원칙이라는 세습과 관련된 규정이 존재했다. 이러한 논리에 근거했을 때 북한은 4대 세습을 이루어 낼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지형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4대 세습에 ‘여성’을 대입할 경우 설득력이 낮아졌다. 김정은에게는 ‘아들’로 추정되는 인물이 존재하고 권력 이전의 준비 측면에서도 2023년 현재까진 미흡한 부분이 많다.

북한의 후계자론에 따르면 혈통계승론과 김일성화신론에서 규정한 논리에는 백두혈통의 인물을 적격한 후계자라 볼 수 있지만, 세대교체론과 혁명계승론에 측면에서 김정은과 같은 세대인 김여정은 부합하지 않으며 다른 세대인 김주애는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비단계론의 경우 브라운리의 두 번째 조건과 마찬가지로 아직 판단하기에는 이르며, 지속적인 관망이 필요한 문제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논의와 전망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사례는 특수성을 나타낸다. 김정일 사망 이후 경제위기, 북핵으로 인한 대외적 제재, 인권문제, 혈통에 의한 세습 등 여러 가지 붕괴요소를 갖추었음에도 현재까지 북한 정권이 건재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여성지도자의 세습이라는 특수한 조건도 북한의 경우에 이례적으로 나타날지도 모른다. 이를 위한 변수에는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이나 ‘경제적 위기’ 등을 꼽을 수 있겠다. 아직까지 이러한 논의는 김정은이 건재하고 김여정의 정치적 활동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어지는 행보에 따라 북한의 변화를 가능할 수 있는 지표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망과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강동완·김현정, 북한의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제정 의미와 북한주민들의 인식: 북한 내부 문건 분석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19(1), 2015.
- 강석승, “김일성 가(家)의 피의 숙청사”, 『사회과학연구』, 4, 2013.
- 곽승지, “북한의 후계자론과 권력승계 과정”, 『안보연구』, 23, 1993.
- 김유민, 『후계자론』, 서울 신학문사, 1984.
- 김재천, 『후계자 문제의 이론과 실천』, 서울 출판사불명, 1989.
- 김종원, “북한의 세습전략연구: 제도적 선점과 견제력 약화”,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6.
- 김창희, “북한의 통치이념 ‘김일성-김정일주의’ 분석”, 『한국정치연구』, 22(3), 2013.

- 류길재, “1960년대 북한의 숙청과 술탄니즘(Sultanism)의 등장”, 『국제관계연구』, 2004-03 9(1), 2004.
- 박광, 김정은 권력승계의 토대와 리더십 구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8.
- 서대숙, 『한국공산주의운동사연구』, 서울:禾多安, 1985.
- 안드레이란코프, 『(소련의 자료로 본) 북한현대정치사』, 서울:오름, 1995.
- 안희창, 『북한의 통치체제』, 명인문화사, 2015.
- 이경식, 『수령의 나라』, 한국학술정보(주), 2021.
- 이교덕, 『북한의 후계자론』, 통일연구원, 2003.
- 이수석, “김정일 후계구도와 북한체제 전망”, 『통일연구』, 14(1), 2010.
-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 역사비평사, 1995.
- 정성장, “김정은 후계체계의 공식화와 북한 권력체제 변화”, 『북한연구학회보』, 14(2), 2010.
- 정영철, “북한의 ‘후계자’론과 현실: 이론의 형해화와 현실의 계승”, 『북한연구학회보』, 13(1), 2009.
- 정유림·오철훈, “김정은 체제 이후 영화에서 나타나는 여성이미지 연구”, 『한국휴먼이미지디자인』 제1권 제2호, 한국휴먼이미지디자인학회, 2019.
- 최경희, “북한 ‘수령권력’ 체제의 생성과 메커니즘”, 『한국과 국제정치』, 32(4), 2016.
- 편집부, [자료]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 원칙, 북한, 1974.
- 황장엽, 『북한의 진실과 허위』, 도서출판 시대정신, 1999.
- Brownlee, J. (2007), *Hereditary succession in modern autocracies*, *World Politics*, 59(4), 595-628.
- Herz, J. H. (1952), *The problem of successorship in dictatorial regimes: A study in comparative law and institutions*. *The journal of Politics*, 14(1), 19-40.
- Hodnett, G. *Succession contingencies in the Soviet Union*. *Probs. Communisim*, 24, 1, 1975.
- Rush, M. *How communist states change their rulers*. (No Title). 1974.
- Tullock, G. (2012), *Autocracy*.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 “국정원, 김정은 첫째는 아들...셋째는 아직 성별 확인 안돼”, 『조선일보』, 2023년 3월 7일.
- “김정은 부인 리설주 패션은 ‘남한스타일’”, 『연합뉴스』, 2012년 10월 2일.
- “北 김정은 사망...중국 외교부장 조카가 말했다”, 『뉴데일리』, 2020년 4월 26일.
- “김여정, 北 2인자...김정은 갑자기 사망할 경우 후계자 가능성”, 『연합뉴스』, 2023년 1월 6일.
- “북한 김정은 혁명사상이 과학이자 진리...‘김정은주의’ 재부각”, 『뉴스1』, 2023년 2월 2일.
- “통일부, 김정은 수령 호칭 늘어...당대회 결정관철·충성 차원”, 『연합뉴스』, 2021년 11월 12일.
- “US monitoring intelligence that North Korean leader is in grave danger after surgery”, 『CNN』, 2020년 4월 21일.

【 Abstract 】

A Critical Study on the Possibility of Succession
of female under the Kim Jeong Un regime in North Korea

Park Yeongjin · Park Donghui

This study is an exploratory study to present a critical opinion on the claim that connects the phenomenon of women's strong external activities in the recent North Korean situation with the possibility of the four hereditary succession.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of consciousness, based on Jason Brownlee's theory of hereditary succession and North Korea's successor, the possibility of female Kim Yeo-jung's succession in the North Korean system was considered. As a result of the study, when Brownlee's theory was applied to the North Korean system, it exactly matched the three hereditary succession processes leading to Kim Il-sung, Kim Jeong-il, and Kim Jeong-un. However, when the variable 'female' was applied, the possibility of succession was found to be inconsistent. 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the theory of succession in North Korea, the possibility of Kim Yeo-jung's hereditary succession was partially consistent.

Key Words : Kim Yeo Jeong, Kim Jeong Un, Succession, North Korea, Jason Brownlee